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

유혁수

1. 들어가는 말

어떤 사회에서든지 친구 세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시대적 변화가 격렬할수록 세대와 계층 간에 마찰이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처럼 친구 구성원 간의 통합이 ‘문제 되는’ 상황은 아주 드물 것이다.¹ 대체로 다른 지역의 재외 동포사회에서는 먼저 정착한 다수

유혁수(柳赫秀)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국제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독일해,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법, 국제경제법이다. Harvard Law School, Johns Hopkins University 객원연구원을 지내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일본 정주를 결심하고 2008년 재일한국인연구자포럼을 설립해 대표를 맡았으며, 한일관계, 재일 동포사회 및 일본사회에 대해서도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 이 글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세 분의 심사자뿐 아니라 조관자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비평』의 편집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며, 한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으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계 일본인’이란 카테고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도 한국/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국/조선인’과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분단된 채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재외동포’ 또

의 사람들이 새로 이주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거나 통합하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로 일본의 화교/화인(華僑/華人) 사회는 극소수의 노(老)화교/화인들이 덩샤오핑(鄧小平)의 개방정책 이후에 정착한 다수의 신(新)화교/화인들과 거의 접촉없이 병존하고 있지만 통합의 문제는 특별히 제기되지 않는다고 한다.²

그에 반해 재일한국/조선인의 경우는 뉴커머가 수적으로 우세한 올드커머 중심의 동포사회에 자연히 흡수·통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오사카(大阪)한인회(2010년), 규슈(九州)한인회[2011년, 후쿠오카(福岡)한인회에서 명칭 변경], 주부(中部)한인회(2012년), 가나가와(神奈川)한인회(2013년) 등 지방에서 한인회 설립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단을 중심으로 하는 올드커머들은 표면적으로는 동포사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얼마나 진지하게 신규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합을 향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재 재일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귀속, 단결, 공생의 세 가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첫번째, 귀속의 문제란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고 귀속의식을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다. 이미 5세까지 진행된 올드커머[자이니치(在日), 구(舊)정주자]들이 한국 국적과 조선적을 유지하면서 ‘조국지향적’

는 ‘재외동포사회’라는 용어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글의 주장의 하나가 국적이 아니고 출신(origin)에 의거해 동포사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재일동포’는 귀화자를 포함하는 일본 국적 소지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일한국/조선인’은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을 지칭하겠다.

2 중국인들은 재류국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화교(華僑)라 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는 화인(華人)이라 칭하고 있다. 화(華) 혹은 중화(中華)자가 붙어 있는 한 국적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인으로서의 오리진(origin)을 공유하고 있다는 함의를 느낄 수 있다. 재일중국인의 경우도, 본국이 분단국가인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출신이 대륙과 대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이니치’(在日)처럼 전전(戰前)에 일본에 온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주축으로 해 1970년대 말 이전에 온 사람들인 ‘노화교/화인’들은 약 5만 명 정도인데 신화교/화인들과는 거의 접촉이 없으며 고령화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 한다[일반사단법인 도쿄화교총회(一般社団法人東京華僑總會) 담당자의 설명]. 그에 반해 1970년 말 이후 건너와 정착한 신화교/화인들은 2003년 일본신화교화인회(日本新華僑華人會)를 결성해 결속을 다지고 있으나, 아직 역사가 일천한 탓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일본화인교수회의(日本華人教授會議), 중국류일동학회(中國留日同學會), 재일중국과학기술자동맹(在日中國科學技術者聯盟), 일본중화총상회(日本中華總商會) 등 직능별로 활동하거나 일본의 지역 또는 중국의 출신지별로 조직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2013년 6월 상순 일본중화총상회 박문걸 국장과의 전화통화 시의 설명).

존재임을 표방하거나 아직 남아 있는 일본사회의 폐쇄성, 배타성 때문에 국적 취득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일본 국적의 취득 건수가 증가했고, 일본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화해 일본의 공공성 구축에 참여한다는 의식으로의 변화도 현저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귀속의 문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사회의 입지를 강화하면서도 민족적 출신과 뿌리를 유지하는 과제와 연결된다.³ 두 번째, 단결의 문제는 올드커머와 뉴커머(新)정주자가 원만하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하는 문제다.⁴ 다시 말하면 재일 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대응해 동포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과제를 의미한다.⁵ 세 번째, 공생의 문제는 여전히 단일민족 신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공존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일본 국적 취득자는 자신의 출신을 감추지 않고 민족적 소수자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한국/북한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본사회의 구성원, 주민으로서 공존하는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⁶

3 귀속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깊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작년 7월 시즈오카에서 발생했다[朝日新聞, (조간) 2013년 7월 28일자]. 시즈오카 시에 거주하는 40대 한국적 자이니치 남성이 근무처 일본인 사장에게 통성명(일본명)을 쓰지 말고 본명을 쓸 것을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300만 엔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했다면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국인에게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후, 필자는 매년 시즈오카를 왕복하며 공원을 지켜보면서 “통성명 사용 여부가 원고의 인격(권)의 일부이며 개인의 존엄에 속한다”는 원고 측 주장의 진제가 얼마만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4 이 글에서는 올드커머[자이니치(在日), 구정주자]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의 패전 후에도 일본에 남기로 작정한 한국/조선인들과 그들의 후손을 의미하는 ‘특별영주자’들과, 특별영주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도 4·3사건 때 일본으로 밀항하거나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전에 건너와서 정착한 사람들로 정의한다. ‘뉴커머’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특히 1980년대 후반 한국 정부의 해외 여행/유학 자유화 이후에 일본에 건너와서 정착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정의해 두겠다.

5 ‘자이니치’(在日)의 정의로서 흥미로운 것은 최근 4년여의 필드워크를 바탕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저서를 발표한 송기찬의 것이다. 송기찬은 ‘자이니치(在日)코리아인’이라는 집단의 범위를 단순히 인구통계상의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외국인등록상의 국적이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등록상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인 사람들과 특별영주자와 일본 정주에 이른 기원이 같지만 귀화나 결혼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손 중에서 스스로를 ‘자이니치코리아인’이라 여기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学校—在日民族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2012, 5쪽.

6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도 ‘다문화 공생’라는 단어가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사회는 일본인에 의해서만 영위되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 당연시되어 온 ‘당연의 법리’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

위의 세 가지 차원의 문제는 그 하나 하나가 워낙 뿌리가 깊어 그 해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자각하면서도 이 글은 두 번째 단결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통합 문제를 정리하고, 동포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하 제2절에서는 우선 재일사회의 현황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정리하고 올드커머의 특성을 뉴커머와 대비하며 기술한다. 제3절에서는 민단과 한인회와의 통합 움직임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민단을 중심으로 재일동포사회의 바람직한 통합 방향에 대해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적고자 한다.⁷

2. 재일동포사회의 현황

1) 숫자로 본 동포사회

〈표 1〉의 통계에서 제일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재일한국/조선인 전체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⁸ 그 원인으로서는 특별영주자의 귀화, 사망 등에 의한 감소가 두드러지지만 유학생 및 다른 원인에 의한 뉴커머의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본에서의 다문화 공생의 허구적 현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上野千鶴子, 「共生」を考ふる, 崔勝久·加藤千香子 編,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在日の経験から』, 新曜社, 2008.

7 이 글은 30여 년 전에 도일한 뉴커머인 필자가 최근 6~7년 동안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 자문위원, 도쿄한국학교 이사, 재일한국인연구자포럼 대표,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자문위원(영사교민분과회) 등을 역임했거나 역임하며 재일동포사회의 빛과 그늘 양쪽을 보아온 개인적 체험에 의거해 집필한 것이다. 이 글의 테마는 재일동포사회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아주 조그만 단면에 불과하지만 과도기적인 한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남긴다는 심정으로 붓을 들었다. 하지만 실존하는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아울러 양해바란다.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다른 하나의 커다란 부분인 조선적 올드커머와 조총련 문제는 너무도 민감하면서도 뿌리가 깊은 사안으로 필자의 능력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로 한국적 재일동포 간의 통합을 주안으로 하는 이 글의 성격상 언급하지 않은 점 양해바란다.

8 최근 수년간 일본의 외국인 전체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뒤늦게 일본 정부도 특전을 부여해 양질의 우수한 외국인을 불러모으고자 연수입, 학력, 직무 경험 등을 점수로 환산해 우대하는 ‘고도 인재 스코어 제도’ 및 영주권 신청 기간 단축 등의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외국인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일본사회 전체의 ‘유인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표 1〉 재일한국/조선인 인구 추이(최근 6년간)⁹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일한국/ 조선인 전체	598,219	593,489	589,239	578,495	565,989	545,401	530,046
특별영주자	438,974	426,207	416,309	405,571	395,234	385,232	377,350
기타(뉴커머)	159,245	167,282	172,930	172,924	170,755	160,169	152,696
일반 영주	47,679	49,914	53,106	56,171	58,082	60,262	62,522
정주/결혼	33,972	33,804	33,411	32,317	30,709	29,591	27,220
유학 등	77,594	83,564	86,413	84,436	81,964	70,316	62,954

감소도 적지 않아 당분간 전체 숫자의 감소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¹⁰

이처럼 정의된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수적인 세력 대비를 보면 숫자상은 2012년 현재 37만 7350명 대 15만 2696명으로 약 2.5:1이지만, 후자의 상당 부분이 유학생 등 비정주 인구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아직 뉴커머가 3:1에도 못 미친다. 뉴커머 수가 2008년, 2009년에 피크에 달했다가 줄고 있는 것은 3·11관동대지진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세계화,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부품)공급 사슬(supply-chain)의 글로벌화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한편, 뉴커머 가운데 일반영주권 취득자가 꾸준히 늘면서 뉴커머들의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 점은 금후의 재일동포사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뉴커머를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던 올드커머들의 인식을 바꾸어 신규 통합이 촉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

9 이 통계는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도쿄총영사관이 일본국 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에 의거해 집계한 것을 필자가 보완한 것이다.

2011년 새로운 출입국관리법 제정에 의해 외국인 관리가 일원화되어 이전보다 신속한 집계가 가능해진 탓에 벌써 2013년 6월 말 재류외국인 통계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실렸다. 재일한국/조선인 전체 수는 52만 6575명으로, 특별영주자는 37만 3689명으로 각각 약간 줄었으나, 기타(뉴커머)는 15만 2886명으로, 일반영주자는 6만 3704명으로 각각 약간이나마 증가해 이 글에서 지적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 2008년 2월 일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해 한국과 일본의 학술적, 인적 교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50여 명의 연구자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연구자포럼(홈페이지 <http://ksfj.jp>)의 경우도 금후 젊은 한국인 연구자의 공급이 이어질지가 중요 관심사의 하나다.

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현재 올드커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단의 가장 큰 문제로 현실적인 묘안이 마땅히 없는 차대세 육성의 곤란을 감안할 때 뉴커머의 정주화 현상은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원활한 연속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¹¹

위의 통계에서 재일한국/조선인의 숫자에 귀화자를 더하고, 1984년 국적법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모친의 국적을 취득한 자까지 합치면 한국/조선 출신자가 100만에 육박한다.¹² 그리고 올드커머와 뉴커머를 합한 수가 53만 46명인데 반해, 비록 국적은 일본으로 바꾸었지만 한국/조선 출신의 동포는 귀화자와 모친 국적의 취득자를 합쳐 어림잡아 45만 명에 달한다. 이 숫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미 올드커머는 수적으로 한국/조선 출신 동포 전체의 1/3밖에는 안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앞으로 동포사회를 국적이 아니고 출신에 의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의 대상과 역점이 재외국민에 국한하지 않고, 출신에 의거한 ‘재일동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이미 귀화자와 (모친)국적 취득자가 출신에서 본 ‘재일동포’의 46%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단·중기적으로는 귀화자가 커밍아웃(coming-out)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본사회가 ‘일본인이 아닌 일본 국민’, 즉 ‘○○○계 일본인’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¹³ 아울러 재일한국/조선인 사회도 아직도 남아 있

11 뉴커머 2세(이하)의 경우 세계화,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어디서 사느냐’(where to live)가 지금보다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게 되겠지만 그들 역시 ‘차세대’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12 한국 외교부는 2013년 9월 말 시점에서 귀화한 한국/조선인을 34만 5774명으로 파악한다(연합뉴스 2013년 11월 2일).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모친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숫자는 아마도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3 문제는 대부분의 귀화자들이 자신들의 출신을 숨기며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커밍아웃시키는 것이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빠트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나는 귀화자들의 커밍아웃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중기적으로는 ‘뿌리찾기 도우미’ 프로그램의 추진, 귀화자들(긍정적으로) 다룬 영화 제작 지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방 한인 단체들의 ‘(문화)살롱화’를

는 귀화자를 배신자 취급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즉 “귀화냐 국적 유지냐”의 양자택일적 시각이 아니고 국적 취득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귀화자들을 널리 포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뉴커머 단체로서의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¹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인회는 2001년 5월 주로 신오쿠보(新大久保)에 정착한 자영업자/비즈니스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앞에서 뉴커머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특히, 1980년 후반 이후에 일본에 온 사람들로 정의했지만 지금과 같은 뉴커머 ‘집단’이 형성된 것은 1997~98년 한국의 IMF위기와 2002년 월드컵 공동 주최를 거치면서였던 것을 생각하면, 한인회 창립 총회가 2001년 5월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갑작스런 한인회 창립 움직임에 허를 찔린 민단으로서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출범 후 한인회는 주로 신주쿠(新宿)와 우에노(上野)에서 등지를 틀기 시작한 뉴커머 자영업자/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이라는 한계는 있었으나, 제3, 4대 조옥제 회장의 재임 이후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인상이었다. 물론 한인회의 규모(회원수, 예산)나 활동에서 보았을 때 뉴커머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언감생심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중일 주일대사 등 주일 대사관의 한인회에 대한 긍정적 시선도 작용하면서 장래에 민단의 대표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을 내재해가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한인회 안에서 민단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생각은 두 갈래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한인회의 역대 회장들은 당분간은 민단과 거리를 두고 한인회를 키워서 민단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월보 발행을 통한

통한 의식적 포섭 노력 등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주류사회에 진출한 귀화자들을 추적 조사해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아닌 일본인’이 오늘의 일본(사회) 형성에 공헌했는가를 증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지 모른다.

14 필자가 아는 한 아직 재일한국인연합회에 대한 정리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의 개인적인 체험에 의거한다. 그리고 민단과 한인회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OKTA 등 경제인단체 등에서도 신/구정주자 간 관계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전자에 한정해서 논하겠다.

대의 홍보와 자문위원회 설치 등 조직 정비에 힘을 썼다. 반면, 제5대 박제세 회장은 간부 연수회 개최 등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민단과 정기적으로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노선을 택했다. 2008년 이명박정권 출범과 함께 나종일 대사 후임으로 부임한 권철현 대사가 민단과 한인회의 조기 통합을 양 단체에게 강하게 주문하고 있었던 것도 신구 회장의 노선 차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민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조직운동이 분열하는 양상은 한인회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필자의 세대는 어릴 적 한국인의 당쟁 근성은 민족성에 가깝다고 배웠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준 사람이 일본인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성균관대 교수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1995년 한일 양국에서 출판된 『양반』이란 저서에서 미야지마 교수는 당쟁을 왕권과 재상권(宰相權)의 긴장 관계의 산물로 보며 우리들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아온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에서 거꾸로 한국인의ダイナ믹한 역동성을 끄집어낸다.¹⁵ 미야지마 교수는 당쟁의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한인회에서 어김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내분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 혼란이 계속된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제세 회장의 임기 만료 직전, 한인회에서 신주쿠한인발전위원회¹⁶를 분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 비롯한 내분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6대 백영선 회장이 취임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도 못되어 2013년 4월 초 사임했다. 그 후 조옥제 상임고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집행부 선출의 책임을 맡고 있다가 작년 8월 이옥순 씨가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¹⁷ 한인회는 설립 후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분에

15 宮嶋博史, 『兩班(ヤンパン): 李朝社会の特権階層』, 中公新書, 1995.

16 신주쿠 지역에서 일본인 사회와 보다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족하여 정기적으로 지역 클린 활동 등을 행하고 있다.

17 『서울신문』의 「[주말 인사이트] 민단 상공인들, 한인사회 주도권 다툼… 한인회는 신구 집행부 알력」(2013. 7. 6, 13면)이란 기획 기사에서는 “2010년쯤부터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민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일부인 400만 엔을 매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회장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해졌다”라고 한인회의 내분을 진단하고 있다.

휘말려 민단에 대한 대안은 커녕 뉴커머 사회의 대표성조차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를 노정해 버린 것이다.

환갑이 지난 민단이 조직의 경직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한인회가 신규 구성원이 병존하는 과도기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¹⁸ 게다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한인회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¹⁹ 각 조직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인회 간부들이 어떠한 자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일본한국인연합회가 내분을 극복하고 지방한인회들이 순조롭게 발전한다면, 언젠가 조직적 체계를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3) 뉴커머와 올드커머와의 관계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같은 한국인인가?”라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이미 5세까지 등장한 올드커머의 영욕의 역사는 그 골이 깊기만 하다.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서로 간에 접점이 별로 없어서 뉴커머가 다가가지 않는(혹은 못하는) 면도 있지만, 문제는 올드커머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유일무이’(sui generis)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드커머 논픽션 작가 김찬정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²⁰ “‘자이니치’(在日)가 자신을 코리안이라 자인해도, 그 코리안이란 조선반도의 코리안과는 다른 ‘민족성’을 가진 코리안일 것이다. ‘자이니치’는 일본의 문화적, 정신적인 영향이 강한 코리안이며, 조선반도의 조선민족과는 조금은 동질성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코리안인 것이다.” 필자와 가깝게 지내는 어느 올드커머 교수는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

18 상기 『서울신문』 기사에서 한 뉴커머 기업인이 “민단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인회 역시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기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한 인식이라 하겠다.

19 2001년에 설립된 재일본한국인연합회(통칭 한인회)와 최근에 잇따라서 설립된 지방의 한인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민단 중앙본부와 지방본부의 관계처럼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재일본한국인연합회도 도쿄한인회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20 金贊汀, 『韓国併合百年と「在日」』, 新潮選書, 2010, 264쪽.

이 말한다. “저희들 ‘자이니치’의 경우는 우리들 ‘자이니치’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니 무리하게 저희들을 이해하려 하지마십시오.” 추측컨대 두 사람 모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올드커머는 ‘한국인성’(韓國人性, Koreanness)에 있어서 뉴커머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두 번째로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일본에서 같은 외국인, 즉 같은 한국인이면서 법적 지위가 다르다. 출입국관리법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특별영주자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일탈한 자로서 전쟁 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 및 그 후손”으로 역사적 경위 및 일본에서의 정착성이 강한 것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특별’ 취급을 받아왔다. 지난 2009년 개정되어 2011년 발효된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영주자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정도 편의성이 증대되었다.²¹

같은 한국/조선인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다. 더구나 혹독한 차별의 역사를 겪은 그들조차도 여전히 일반 외국인과 같이 아직 치안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지 않은 일본의 현실이야말로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특별영주자와 일본인 혈통을 가진 (주로) 남미에서 온 노동자를 가리키는 ‘닛케이진’(日系人)이란 두 개의 카테고리가 외국인을 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일동포사회도 분단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²² 이미 언급했듯이 올드커머들은 뉴커머의 ‘정주성’ 여부에 대

21 특별영주자 증명서 휴대의무는 삭제되었지만 제시의무는 남아 있는 등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다. 山田利行ほか, 『新しい入管法: 2009年改正の解説』, 有斐閣, 2010, 118쪽.

22 외국인, 나아가서는 재일동포사회를 분단할 수 있는 잠재성이란, 예를 들면 2007년부터 테러리스트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은 입국 시에 지문을 남긴다고 사진을 찍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특별영주자들이 제외됨에 따라 이 제도의 부당성을 어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데 방해 요인이 된 것과 당분간 소생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외국인지방참정권 법안의 일부는 특별영주자에 한정해서 참정권을 인정하려는 내용이다.

한편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닛케이진에게 혈통을 이유로 말하자면 금지되어 있는 단순노동자를 입국시켜 왔다. 한때는 30만 명을 넘는 닛케이진이 재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 23만 명까지 감소하였는데, 법무성은 2010년 “닛케이 정주외국인시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재류 기간을 갱신할 때 일정한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닛케이진의 일본사회에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小畑郁, 「入管法2009年改正と日本移民政策の「転換」」, 『法律時報』 84(12), 2012, 7쪽.

해서 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점이 신규 정주자들 간의 신뢰(trust) 조성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생활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자 관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간사이(関西)지방, 특히 오사카에서는 올드커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비교적 올드커머와 뉴커머가 어울리는 기회가 많다고 한다. 그에 비해, 간토(關東)의 경우에는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숫자가 비등하면서 서로 간에 어울리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한다. 대도시권보다는 지방에서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교류 기회가 많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 현재 뉴커머가 민단 지방본부나 지부 간부급에 진출한 예가 있지만 아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²³

3. 민단과 한인회와의 통합 움직임

민단과 한인회와의 통합 의사에 관해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는 2011년 9월 3일 한인회가 간부 워크숍 참가자 22명에게 행한 앙케트 조사다.²⁴ 그 결과를 보면, 22명 가운데 통합에 대한 반대가 12명이고 찬성이 10명으로 거의 호각을 이루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i) 민단의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ii) 연공서열이 강하고 젊은 인재의 참가가 곤란하다, (iii) 한국어가 안 되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다(특히 자녀 교육 관련), (iv) 세대차

23 얼마 전까지 신주쿠지부 단장이던 뉴커머가 도쿄 지방본부 부단장이 되었다. 야마나시(山梨) 현의 경우 3대 관리직 중 의장과 감찰위원장이 뉴커머인데 그 배경에는 야마나시 현에 귀금속 가공업자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24 본 앙케트는 2011년 11월 10일 “재일동포사회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대사관 (비공개) 세미나에서 당시 한인회 회장이 “신정주자의 입장에서 본 재일동포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표 자료에 들어 있던 것이다. 비공개로 개최된 상기 세미나에서 배부된 자료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주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재일한국인사회의 역사의 한 단면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필자의 도덕적 책임을 각오하고 인용했다.

가 크다, (v) 조직이 크면서도 봉건적이고 뉴커머 흡수에 소극적이라는 의견 등이다. 즉, 민단이 동포의 권익 옹호보다는 본국과의 정치적 관계 유지에 힘을 쏟고 있으며, 1, 2세 중심의 연공서열 때문에 젊은 인재를 중용하기 어렵고, 한국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도 역시 다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i) 민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 (ii) 교민을 대표하는 단체는 하나면 족하다, (iii) 단체 간의 중복을 피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iv) 신규 교민 간의 구분은 불필요하다, (v) 최근 민단이 포용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이다. 즉, 민단도 포용적으로 바뀐 현 상황에서 민단의 역사적인 실적을 인정하면서 교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불필요한 중복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종래 한인회 내부에는 신규 통합 문제에 두 가지 생각이 병존하고 있었다. 한가지는 가능한 한 뉴커머의 힘을 결집하여 교섭력을 키우면서 민단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자는 것으로, 최근의 잇달은 지방한인회 설립의 배경에는 이러한 생각이 공유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시점에서 온당한 통합을 추구하려는 생각으로 그 배후에는 “민단이 포용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5대 박정희 회장단에서 민단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졌던 사실은 후자 노선이 추진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두 가지 노선 모두 최종적으로 민단과의 합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와 방법론상의 차이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1년 11월 10일 대사관이 주최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신규 통합(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인회가 민단에 요망하는 사항을 취합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민단의 명칭 변경 검토 필요, (ii) 민단의 교민 정책 수립 시 뉴커머 의견 반영 필요, (iii) 민단 조직의 슬림화: 조직 축소 및 재정적자 해소, (iv) 민단 중앙 및 도쿄/오사카 지방본부 간부직을 뉴커머에게 당연직으로 제공, (v) 젊은 인재 등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vi) 올드커머 단체와의 통합, (vii) 통합을 위한 위원회 설립 필요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규 통합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병존하고 있는 한

인회 내부에서 이상과 같은 요망사항이 어느 정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나왔는지 알기 어렵지만, 큰 틀에서 중요한 맥락을 짚고 있다. 민단 명칭의 변경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겠으나 정책 수립 시 뉴커머의 의견 반영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민단 조직 개편과 젊은 인재 등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요구는 민단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문제다. 하지만 중앙본부, 도쿄 및 오사카 지방본부 간부직 제공을 요구하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사안이 어차피 충분한 협상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민단과 산하단체들과의 통폐합이 어느 선에서 어떤 식으로 성사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교민을 대표하는 단체는 하나면 족하다”는 입장에 합의한다면 신구 통합은 최종적으로는 도달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통합에 관한 민단 측의 의견은 당시 민단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나온 자료에서 확인된다.²⁵ 그에 따르면, 민단에서도 공통의 목적/구성원을 가진 단체와의 통합 추진을 민단 중앙본부 3대 사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민단 역시 동포사회의 구성원과 가치관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단체 설립과 기존 단체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동포사회의 분열, 분산화가 가속화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적 상황에서 민단이 기존 산하단체/산하기관에 대한 구심력 강화와 경제상공인/문화학술인/법조인 등 분야별 단체의 규합, 그리고 공통의 목적을 가진 신정주자 조직인 한인회와의 통합을 활동의 목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료의 마지막에는 이상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단/‘자이니치’ 활성화 기반구축 Plan 작성위원회” 설립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한인회와 민단과의 정기적인 접촉이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는 듣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양측 모두 진정한 통합 의사가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느 쪽 특히, 한인회 측 교섭 능력 부족이 가져온 전술적 실패의 차원인지는 알 길이 없다. 전자라면 양자 간의 만남은 내·외부적인 요인에 이끌린 피포

25 상기 “재일동포사회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대사관 (비공개) 세미나 자료 참조

먼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후자라면 금후 실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작금의 재일본한국인연합회의 내분, 그리고 지방한민회의 역사적 일침함이 노정되는 한민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한민회에 신규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²⁶ 현재로서는 민단을 중심으로 신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과연 민단이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의향과 실체를 가지게 될 것인가? 민단을 주축으로 신규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개혁과 절차는 무엇인가?

4. 민단 중심의 신규 통합의 가능성과 과제

1) 민단의 지향과 현실과의 괴리

2013년 5월 9일 ‘재일한인포럼 오래’(회장 조옥제) 발족 1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오공태 단장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민단 단장이 뉴커머 모임에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라는 자체가 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민단신문의 보도와 참가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통합을 향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대일로 만나면 한국인이 강한테 3명 이상이 되면 일본인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속설에 의거하면서 재일동포사회 전체의 “단결”을 호소했다고 한다. 민단 단장이 통합에 대한 의욕적 태도를 표시한 사실은 전향적이지만, 그것이 민단 중앙본부 전체의 진의인지는 확실치 않은 가운데 여전히 구체적인 이정표는 결여되어 있는 현실이다.

신규 통합의 진정성이 확실치 않은 사태에 대해서는 민단도 한민회도 서로의 접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겠지만, 최근에도 종래의 방침에 의거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사무총장

²⁶ 내분 후 재건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재일본한국인연합회는 물론이고 지방의 한민회들이 적어도 뉴커머 전체 또는 지역 뉴커머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실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속단하기 어려우나,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 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 있었던 경제상공인/문화학술인/법조인 등 분야별 단체를 규합해 나가는 목표가 2012년 11월에 창립된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의 산하단체 신청이 2013년 2월 민단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실현되었다. 하지만 상기 포럼은 10년 이상 전에 민단, 총련, 귀화자가 함께 설립해서 활동해 온 ‘재일코리아변호사협회’(LAZAK)의 일부 변호사들만으로 결성된 것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진정 재일동포사회 통합을 위한 실천으로 유효한 것인지 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²⁷

민단이 지향하는 바를 민단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한국 민단은 재일한국인을 주체로, 한반도에 뿌리(root)를 갖는 일본 국적 동포까지도 아우르는 민족단체입니다. 재일동포를 위한 상부상조 및 친목행사 외에 권리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자 단체이기도 합니다”라는 자기 규정에서 찾을 수 있겠다. 즉, 외국인등록증에 ‘조선’이라 기재되어 있는 동포를 제외한 귀화자(일본 국적 취득자)까지 아우르는 ‘재일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한인회는 물론이고 민단에 필적하는 재일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²⁸

하지만 민단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 민단의 실체는 홈페이지에서 강조한대로 ‘재일동포’(를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여전히 울드커머인 ‘자이니치’(를 위한) 단체라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8일 민단 창립 65주년 기념식에 관한 민단 홈페이지 기사를 보면 “오늘날 재일동포와 조국을 에워싼 정세는 창단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변했으며, 민단의 구성원도 2010년 12월 현재 약 8만 5000세대, 34만 2000명, 지방본부 48, 지부 283, 분단 117, 그리고 1367개 반(班)을 거느리는 생활자단체로 성장했습니다”라

27 이미 회원이 100명 이상으로 증가한 LAZAK은 법조인이란 공통분모 속에서 민단체 ‘자이니치’, 총련계 ‘자이니치’, 그리고 귀화자 등 다양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일부 민단체 변호사들에 의한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의 창설이 LAZAK의 미래에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8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의 창립 총회에서 고영의 초대회장은 분명히 민단은 “일본의 국가기관과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본국과도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재일사회의 유일한 단체”라고 단언했다(『民團新聞』, 2012. 11. 21).

고 되어 있다. 즉, 구성원이 올드커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미 오래 전에 규약을 고쳐서 귀화자도 단원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귀화자도 지부에서는 단장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고쳤지만,²⁹ 양쪽 다 숫적으로 여전히 드물고 간간히 간부가 되는 경우도 대부분은 민단과 관계를 갖고 있다가 도중에 귀화한 사람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뉴커머가 지방본부 또는 지부 레벨에서 단장이나 간부가 되었다고 들려오지만 아직은 극히 일부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으로 민단이 뉴커머를 폭넓게 포용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잇따른 지방한인회 창설의 이유가 민단과의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가 없다고도 못 할 것이다.

게다가 과연 민단은 현재 약 8만 5000세대, 34만 2000명의 ‘자이니치’를 진정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상기 민단의 지방본부, 지부 및 분단은 도대체 얼마 만큼의 ‘자이니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생활자단체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일까? 지방의 현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역 차이는 있지만 세대 간의 단절 속에서 1, 2세 중심의 친목단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³⁰ 한 민단 간부는 실제 파악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자이니치’는 ‘미나시단원’(みなし団員, 단원으로 간주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러한가? ‘미나시단원’을 얘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통성과 대표성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게도 적어도 묵인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민단에게 그 정도의 대표성이 남아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2) 신규 통합에 관련된 민단의 과제와 몇가지 제안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은 민단이 진정한 ‘재일동포’ 단체가 아니고 올드커머 단체라는 점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를 비롯해 누구도 현재 동포사

29 도쿄 오타(太田)지부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의 ‘자이니치’를 위한 단체라는 간판을 바꾸지 않은 채 지부 레벨이라고는 하나 귀화자를 단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말이 전도(顛倒)된 것이라 비난한다.

30 지난 4월 가나가와 현의 어떤 지부 총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인데, 간부 중심의 총회 참석자가 중앙본부, 지방본부, 총영사관 영사와 거래처 일본인 수 명 등 내빈들 숫자와 비슷했다고 기억한다. 물론 극단적인 과소(過疎) 지역의 경우라고는 하나 현재의 민단 지부 현실의 일면을 나타나고 있다.

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민단에 필적하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또한 재일동포사회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모해 가기 위해서는 민단의 변화가 필수적이란 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필자는 현행 민단의 시스템을 전제로 해 민단 변화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³¹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울드커머는 숫적으로는 출신으로 본 재일동포 전체의 1/3밖에 안되며 더구나 민단은 울드커머의 일부만 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민단이 민단에 충성을 다하고 민단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민단이 전체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도록 재일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복합화를 반영해야 한다. 즉, 울드커머+뉴커머+귀화자+모친 국적 취득자 모두에 입각한 ‘자생적’ 단체로 탈바꿈하면서 그에 맞춘 조직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히 민단의 홈페이지와 전술한 사무총장 보고서에도 민단 스스로가 재일동포사회의 다양화를 전제로 한 생활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 하는 점인데, 현재 민단에서도 중앙위원회안에 기획I, II, III분과위원회, 조직분과위원회, 생활분과위원회 및 문교분과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민단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단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민단 홈페이지에도 나타나 있다.³² 하지만 상기 활동의 목적이 민단/‘자이니치’의 활성화에 치우쳐 있는 데다 분과위원회 구성원이 전원 민단 내부에서 선발되어 있을 뿐이며, 활동 내용을 외부에서는 거의 알 수 없

31 민단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민단의 중추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민단이 지향하는 바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괴리를 매우려고(위기의식을 갖고) 진정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이러한 분과위원회 설립이 상기 사무총장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민단/‘자이니치’ 활성화 기반구축 Plan 작성위원회” 설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종래부터 민단 내부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는 것이 문제다.

현재의 민단의 노력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기 분과위원회를 통괄하는 (가칭)“민단/‘재일동포’ 활성화 기반 구축 위원회”를 만들고, 분과위원회를 포함해 위원의 반을 민단 외부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올드커머, 뉴커머 그리고 일본국적 취득자 중에서 골고루 발탁해 (i) 민단 중심이지만, (ii) 재일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위원회는 “풍요로운 재일동포사회 구축을 위한 대동단결”(사무총장 보고서)을 위한 미래 설계와 그에 필요한 민단의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상기 위원회가 좋은 그림을 그린다 해도 민단이 진정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림에 떡’이나 단순한 구호에 그쳐버릴 것이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존의 민단 의사결정 시스템에 두 가지 보완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하나는 민단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일동포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한 현실에 맞추기 위해 현재 민단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이다. 단/중기적으로 현재의 민단 관계자 중심에서 민단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를 발굴해 ‘중앙위원회’를 일정 선까지 보완/대체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³³ 일정 선이 어디인가는 미리 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2, 3할 정도로 하고 그 후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³⁴ 누구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는 우선은 상기 “민단/‘재일동포’ 활성화 기반 구축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민단의 중앙위원회는 직접 위촉되는 일정 수의 ‘직선 위원’을 제외하고는, 민단의 중앙/지방 조직 및 각종 산하단체에 배분되어 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단의 ‘조직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중앙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 더구나 그 일부를 외부에서 충당하자는 제안은 현재의

33 민단의 조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mindan.org/shokai/kikou.html>

34 우연히도 현재 상당 정도 중앙위원이 결원 상태라 하니 우선은 다양한 동포를 발굴해 충원하는 작업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민단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민단이 전체 재일동포사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했던 만큼 동포사회의 다양화/복합화로 인해 상기 전제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단의 ‘조직 민주주의’에 일정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향후 민단 간부 채용 시 뉴커머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³⁵ 뉴커머들의 정주 정도는 일본에서 태어나 대대로 일본을 생의 거점으로 살아가는 올드커머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영주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세계화가 발빠르게 진전된다 해도 사람의 일생이란 그리 간단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정주도가 높은 뉴커머 중에서 동포사회를 위해 땀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뚜렷하며, 또한 한국어가 가능한 만큼 모국과의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민단 간부로서는 안성맞춤이다.³⁶

마지막으로 민단이 재일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체계와 규모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단은 중앙본부, 지방본부 48, 지부 283, 분단 117, 그리고 1367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조직 구조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개선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

35 아마도 올드커머 특히, 민단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 동포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뉴커머들은 먼저 지방/지부 레벨에서 ‘수업’을 쌓으라 하겠지만, 지금의 올드커머와 뉴커머 교류 현실에서 볼 때, 민단 중앙본부, 도쿄나 오사카 같은 큰 지방본부가 ‘정책적으로’ 상당수의 뉴커머를 간부급으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6 단장, 의장, 감찰위원장이란 3기관장 밑에서 실질적으로 민단 중앙본부를 떠받치고 있는 부단장, 국장 및 간부들의 경우는 3기관장만큼 재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어떤 기준과 경로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올드커머들에게 높은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어 때로는 우수한 인재가 배제되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다. 민단 간부에게 모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드커머의 경우는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은 가점 요인 정도로 하고 채용 후 한국 연수 기회를 부여하며 직급이 높아감에 따라 보다 높은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동포사회 구성원이 다양화하고 있으며 올드커머의 세대 간 교체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세분화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낭비가 너무 크다. 현재 세대 교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지부 레벨의 동포 자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간토지방협의회 등 7개로 나뉘어져 있는 지방협의회를 9개의 총영사관 구역 및 재일동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분포를 참조하면서 십수 개로 늘리면서 지방/지부/분단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³⁷ 이 때 중요한 것은 십수 개의 지방협의회 레벨은 민단의 공식 조직 계통으로 삼고, 현재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지방한인회를 자연스럽게 통합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³⁸ 그리고 통폐합되는 지부 및 분단의 자산을 재일동포들의 복지시설 및 일본사회(인)와의 사회문화적 교류/공존 공간으로 ‘(문화) 살롱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³⁹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살롱’은 한국과 한국적인 것에 흥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그들과 같이 운영되면서, 재일동포와 일본인들과의 교류와 공존이 진척되는 장소가 될 것이며, 특히 귀화자 등 일본 국적 취득자들이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기존의 질서에 손을 대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자연의 이치에 가깝다. 오랫동안 일본사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에서 배제된 채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권이 재일한국/조선인 사회밖에 없는 재일동포사회의 현실에서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방본부, 지부

37 조직 구성 및 규모의 재편에는 민단의 재단화가 필요한데, 이미 지방본부 차원에서는 재단 설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어 가나가와 지방본부는 수년 전에 재단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민단 중앙본부의 재단법인화는 민단 중앙본부가 재일동포들의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치지 않는 (분단의) 역사성/정치성을 띄고 있는 만큼 지방 레벨의 법인화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그에 수반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38 지방협의회로 재편하게 되면 현재 설립이 잇따르는 지방한인회와 통합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9 현재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정부 운영) 한국문화원에 수십 개의 민영 한국문화원이 더해진다. 상상해 보라. 지금도 민단 지부 레벨에서 한국어 강좌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금후는 일본 전역에 이러한 살롱들이 전개되어 일본사회와 다문화 공생/문화 교류의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및 분단을 정리/해체하여 십수 개의 지방협의회로 개편하는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자칫 나름대로 기반을 이룬 동포들로부터 가뜩이나 제한된 공공권 참여 기회를 더욱 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문제다.⁴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에서도 공공성의 인식과 공공권의 재구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⁴¹

5. 맺는 말

이 글에서 누누히 지적했듯이 재일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복합화가 진행된 지 오래다. 올드커머는 이미 5세까지 나왔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일본사회에 융해/용해되어 간 반면, 1990년대 후반부터 올드커머와는 많이 다른 뉴커머들이 급속히 늘어왔던 것이다. 되돌아보면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불거진 ‘납치 문제’ 이후 재일동포사회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외국인 지방참정권 실현 가능성의 후퇴, 민단/조총련의 화해 시도 실패와 반동, 조총련의 조락과 그에 따른 조선학교의 폐지/축소, 작금의 험한 현상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의 폭거 등, 재일동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이후 최근의 한일관계의 악화 속에서 재일동포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긴급을 요하며 역사/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들이다. 한시 바빠 동포사

40 와세다대학의 이성시 교수는 현재의 동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근간으로서 일본말로 표현해서 ‘마쓰리’(祭り)공간이 작은 것, 즉 인간의 본능으로서 사회봉사를 하고 그에 맞는 명예(즉, 단장, 의장 등 감투와 서훈 등)를 누리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41 재일동포들의 공공권 참여 기회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본사회가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등 다문화 공생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적을 취득해 ‘한국/조선계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주류사회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본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회 전체의 역량을 집결해 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순부터, 그리고 단/중/장기적인 구분을 해가며 지속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르시즘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한국인은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다. 하지만 동포사회(단체들)의 개혁이 늦어지는 가운데 우수한 올드커머, 뉴커머 그리고 일본 국적 취득자들의 재능이 동포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란 말이 있듯이 이제야말로 재일동포사회의 예지를 하나로 모아 적재적소에서 적절히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민단밖에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민단이 분단국가의 역사적/정치적 모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욕을 겪어왔는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⁴²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재일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귀속’과 ‘공존’이라는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선 ‘단결’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신구 구성원 간의 통합/융합이 필요하다.⁴³ 그리고 이 글에서 강조했듯이 신구 통합의 과제는 민단이 자기혁신을 피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온당한 길인 것이다.

민단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해야 한다”고.⁴⁴

42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641명의 ‘자이니치’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해 135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이 되고 242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재입국을 거절당해 불과 1/3밖에는 일본에 귀환하지 못한 역사는 올드커머뿐 아니라 뉴커머도 공유해야 할 ‘재일동포’ 전체의 귀중한 역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金贊汀, 『在日義勇兵帰還せず』, 岩波書店, 2007을 참조.

43 얼마 전 뉴커머 리더의 한 분으로부터 금후 재일동포사회는 현재 민단과 같은 백화점식의 ‘민족단체’의 형태가 아니고, 일본사회에서 스스로의 권익 실현을 위한 (로비스트적인) 이익단체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시사적인 말씀을 들었다. 예전부터 주장되어 온 네트워크 형태의 재일동포단체의 발전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나 이 글에서는 재일동포단체의 현실을 전제로 논고를 전개했다.

44 영화 <산묘>(山猫, 1963)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서 미국을 방어하는 데 법적 근거를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로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미국과의 공조 무력 행사에 제약이 거의 줄어들게 되어 잘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에 일본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만약 일본이 개헌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 정서는 개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석개헌’이라는 수단이 어느 단계까지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일본의 재군비, 우익, 자위대, 방위청, 집단적 자위권, Y위원회, GHQ

연구논단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 | 조아라

투고일자: 2013. 11. 26 | 심사완료일자: 2013. 12. 9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한미일 외교문서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냉전체제 하의 안보 논리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각국의 국내·국제 정세 속의 ‘경제 논리’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국이 부담할 비용의 최소화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여,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방식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회담의 중지를 가능한 한 막고, 공적인 강제나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한일회담의 ‘관계자’로서 기능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종필-오히라 합의가 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 글은 케네디 정권이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타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신중한 개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비대칭적으로 행사되었음을 주장한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대미 교섭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권 교섭의 주도권은 주로 일본이 쥐게 되었으며,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동조하고 이를 한국에 설득시키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 자체의 난점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상황, 일본의 대미 교섭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케네디 정권, 원조정책, 비대칭적 압력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3. 12. 1 | 심사완료일자: 2013. 12. 10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최근 구성원이 현저하게 다양해진 재일 동포사회에서의 올드커머(자이니치, 구정주자)와

뉴커머(신정주자) 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종래 올드커머뿐이었던 일본의 동포사회의 구성원은 많은 올드커머의 귀화(34만 5000명으로 추산)로 인해 올드커머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뉴커머는 어느덧 16만 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이미 6만 명이 넘는 뉴커머들이 영주권을 획득해 정주하고 있다. 더구나 1984년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10만이 넘는 동포 자녀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구성원의 다양화를 전제로 한 동포사회의 변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융합이 늦어지는 가운데 제일 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신구통합이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단이 하루 빨리 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자기혁신을 꾀하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민단의 과제를 정리하고 민단의 변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주제어: 제일 동포사회, 재일한국/조선인 사회, 올드커머, 뉴커머, 민단, 한인회, 신구통합

U.S. came to realize that Japan should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Korea and East Asia as a whole through means of assisting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To begin with, the U.S. stayed in close contacts with both Korea and Japan,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continuing the negotiation without serious ruptures. In addition, the U.S. tried to bridge the gap in terms of the figure of claim settlement, while neither staging a direct intervention nor using a coercive means to either of the parties.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U.S. was virtually “the third party” i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political compromises such as ‘Kim Jong-pil and Ohira Memorandum’ signed in late 1962.

Furthermore,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asymmetric pressure” of the U.S. toward Korea and Japan, despite the fact that the Kennedy administration devoted considerable efforts to resolve the claim issue and began to stage “cautious intervention.” Since Japan was the most important ally in U.S.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it enjoyed more freedom in making decisions against U.S. policy than Korea. Based on this relative advantage, Japan usually took the initiative in the negotiation. The U.S. did not oppose to the resolution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equently, Korea was persuaded by Japan and United Stat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im issue, domestic situation of Japan, and Japan-U.S. relationship had all together resulted in this ‘asymmetric pressure.’

• **Keywords:**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claim negotiation, Kennedy administration, foreign aid policies, asymmetric pressure

Struggles and Challenges of the Zainichi Korean/Chosen Society: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Old” and “New” Comers | YOO Hyuck Soo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cess of integration between the “old-comers” and the “new-comers” in the zainichi Korean society, which recently has shown significant demographic diversity. While the number of “old-comers,” which consisted most of the zainichi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every year as many naturalize to Japanese citizenship (estimated as 345,000), the number of “new-comer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late 1980s and now reached 160,000, among which 60,000 now hold permanent residency. In addition, as the revision of Nationality Law in 1984 adop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lines in determining child’s nationality, an estimated 100,000 children of Korean descents possess Japanese nationality, calling for an urgent change in zainichi society. However, the zainichi society lacks any swift and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 the variety of issues it faces today, as the merging of old and new comers are being delayed. This study takes the premise that Mindan must take on self-renovating measures in order to deal with the diversifying zainichi Korean/Chosen society, and provides several concrete suggestions as to what can be done while adapting to this newly-changing internal social dynamics.

• **Keywords:** zainichi Korean society, zainichi Korean/Chosen society, old-comers, new-

comers, Mindan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Kanjin-kai, integration of the old- and new-comers